

기
종
1975. 8. 22.
자 안심

國統 75-7-13

2
50

統一弘報活動의 效率化 方案

민
용
수파) 5/11

1975. 5.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5.

연구책임자 : 윤 상 철

目 次

緒 論	3
1. 統一弘報의 意味	3
2. 韓國의 特殊狀況	10
3. 國內認識의 差異	12
第 1 章 國內弘報政策의 基本方向	15
1. 國內弘報의 對象	15
2. 弘報媒体 또는 方法	19
第 2 章 弘報政策과 技術	21
1. 弘 報 政 策	21
2. 弘 報 技 術	25
第 3 章 效率的인 統一弘報 展開方案	29
1. 統一政策의 背景	29
2. 統一政策의 基盤造成	34
第 4 章 統一弘報政策의 問題点	41
第 5 章 統一弘報의 구체적 方案	46
第 6 章 國內미디어의 動員方案	54
結論 및 建議	59

緒 論

1. 統一弘報의 意味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分斷의 現實에 終止符를 찍고 統一國家를 形成해야 한다는 이른바 「統一論議」에 있어 막연한 感情的인 次元의 統一, 그 自体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수 없으나 統一의 目標과 方法에 있어 認識의 差異가 深大함을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統一政策을 樹立·執行하고 있는 政府當局의 立場에서도 이와같은 認識의 差異나 意識의 乖離現象을 제쳐놓고 統一弘報의 成果를 기대할 수는 없게되어 있다.

統一問題가 口號만으로 그쳤던 50 ~ 60年代와는 달리 70年代에 들어서면서 1970年의 朴正熙대통령의 8.15宣言을 계기로 統一問題에 대한 接近이 現實적으로 具體化되기 시작했으며 1972年 7.4 聲明을 고비로 統一問題는 과거와 같은 感傷的인 次元에서만 다룰수 없는 國民각자가 피부로 직접 느끼고 解決의 方案을 모색해야만 할 艱박한 問題로 클로우즈 업 된것이다.

統一問題의 緊迫性은 安逸한 卓上空論을 許容하지 않게했으며 幻

想的으로는 異論의 余地가 없었던 統一에로의 接近法에 여러가지 意見이 제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異論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國民的 關心度와 參與意識이 強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자칫잘못하면 國論分裂을 助長하고 鐵筒같이 굳어져있는 北傀의 統一路線에 대한 對抗能力을 喪失해 버릴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點에 비추어볼때 統一論議의 統合化내지 歸一化가 重要視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國民的輿論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政府가 組織的이고도 技術的으로 다듬어온 統一問題에 대한 戰略戰術의 對國民弘報가 필요하게 된것이다.

그렇다면 政府가 指向하고 있는 統一問題에 대한 認識은 어떠한 것인가,

韓半島의 南側에는 自由民主主義의 理念을 표방하는 大韓民國이 존재하고 있으며 北側에는 共產主義理念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體制가 존재하고 있다는 基本的인 認識을 한시도 우리의 念願에서 지워버릴수 없다.

南北의 兩體制는 단순히 理念과 思想과 制度를 달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歷史觀과 價值體系와 生活樣式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같이 2개의 體制가 대치하고있는 상황하에서 統一을 가능케 하는 條件은 극히 圖式的으로 말한다면 兩體制의 單一化, 또는 一方體制의 他方體制에로의 吸收밖에 다른방법이 없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3천 3백만의 韓國民은 自由民主主義를 信奉하면서 共產主義를 배격하고 있는반면, 1천 4백만의 人구를 장악하고 있는 北韓共產政權은 共產化統一이외의 方法에 의한 統一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理論上으로 2개의 體制를 單一化하는 方法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南北韓國民의 總意에 물어 多數가 선택하는 바에따라 體制를 통일하는 方法이 있다.

그렇지만 南韓의 人口가 北韓에 비해 倍以上 많다는 사실과 南韓이 開放體制인데 반해 北韓이 閉鎖社會라는 점등에 비취 北韓에서 는 소위 多數決에 의한 統韓方法을 수락할리 만무한 것이다.

이와같은 現實을 감안해보고 또 실제로 1972年 7.4 공동성명이후 南北韓間의 빈번한 往來를 통해 접촉을 거듭해본 결과 理想으로서 의 統一을 실현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일인가하는 것을 切感하기 에 이르렀다.

다만 武力에의한 분규보다는 對話를 통한 安定의 추구가 무엇보다

다 바람직 한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안정되고 영속적인 平和定着을 위해서는 南北의 兩體制間에 相互否定과 간섭을 배제하고 平和關係의 定立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1971年 8月 韓國이 南北赤十字會談을 제안한것도 바로 그와같은 취지에 입각한 것이었다.

南北赤十字회담의 目的은 南北韓에 離散된 1천만가족들의 相互住所 및 生死확인과 相互訪問 및 對質, 편지교환의 주선과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再結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서 統一基盤조성에 기여하자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人道的사업은 南北韓間의 긴장을 완화하고 誤解와 不信을 해소하며 民族的연대의식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希望했다.

韓國은 또 南北對話를 단순히 人道的次元에 局限시키지 않고 政治的次元으로까지 昇華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7.4 공동성명의 서명으로써 발전시켰다.

韓國이 당초 北韓에 南北對話를 제안한 근본적인 목적은 對話를 통해 韓國의 統一政策을 추구하는 하나의 手段으로서 利用할 가치

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北韓도 역시 그들의 統一政策을 실현하기 위해 對話에 임한것도 사실이다.

韓國정부가 對話의 과정을 통해 성취하려했던 것은 分斷祖國의 平和統一을 가능케하는 일련의 中間과정을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韓半島의 再統一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서로 다른 歷史觀·價值體系, 思考방식, 言語의 장벽등을 解消, 同化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南北關係의 現實은 不信의 벽으로 차단되어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不信과 對立을 해소하고 信賴關係를 회복함으로써만이 平和定着의 기반을 구축되는것이기 때문이다.

韓國은 北韓과의 대화를 통해 ① 韓半島에서 正規戰은 물론, 地雷浸透등 非正規戰과 스파이, 地下工作員에 의한 間接侵略行爲를 금지함으로써 戰爭要因을 억제하고 ② 南北의 異質的인 體制下에서도 과도기적인 平和共存關係를 확보하며 ③ 雙方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힘으로서 相互信賴를 회복하고 民族的인 同質性을 되찾으며 ④ 이렇게 함으로써 平和的인 통일기반을 구축해나가는 일종의 和解와 同和의 과정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1973年 6月23日 朴正熙대통령이 선언한 「平和와 統一에 관한 韓國의 새로운 外交政策」에 의해 韓國의 基本입장은 더욱 분명해졌다.

朴대통령은 南北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平和적인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長期間이 필요하다고 前提, 統一을 實現할 때까지의 過渡적인 暫定措置로서 ① 南北韓이 서로 內政干涉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음으로서 韓半島의 平和를 維持하고 ② 南北共同성명에 입각한 對話를 계속함으로서 구체적인 對話성과를 거두자고 호소했다.

이 宣言은 또한 유엔과 國際기구등에 北韓과 같이 加入하는것도 反對하지 않겠다는점을 명백히 했다.

요컨대 이 宣言은 統一까지의 過渡적인 暫定措置로서 南北韓이 平和共存해 가자는 것이었다.

1974년 1월 18일 朴大統領은 또 南北相互不可侵協定の 체결을 제안, 平和指向적인 統一接近政策을 한층 鮮明히 했다.

南北不可侵協定은 ① 南北韓이 서로 武力侵略하지 않는다는점을 万天下에 約束할것. ② 서로 相對方의 內政을 干涉하지 않을것 ③ 어떠한 경우라도 現存하는 休戰協定の 効力을 존속시킬 것등을 요청했다.

1974년 7월 5일 高麗大學校 아세아問題研究所주최의 「韓半島 주변 정세와 南北關係」라는 제목의 學術會議에서 金溶權 당시의 統一院 장관은 『오늘날 南北間에는 外交, 國防, 財政 등 各分野에서 완전히 容認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를 구성원리로 하는 異質體制가 확립되어 教育·文化 등을 비롯한 民族의 歷史에 대한 概念과 解釈의 방법마저 서로 다르며 言語生活에 있어서도 異質化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모색하는 統一은 統一成立의 條件이 날로 改善되어가는 「過程으로서의 統一」에 그 目標을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장관은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은 南北間의 冷戰的對峙狀態의 解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결코 分斷을 固定化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에서 우리는 統一論議의 現實과 南北關係를 概略적으로 더듬어 보았거니와 이와같은 統一問題에 관한 우리의 立場이 철두철미하게 國內外輿論에 침투되어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統一弘報의 積極的인 意味가 부여되는 것이며 統一方案의 內容 그自体에 못지않게 弘報技術上의 問題가 더욱 切實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統一問題가 단순한 感傷的인 次元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새삼스럽게 認識하면서 國民的인 레벨에서 뿐만 아니라 外國정부나 국민들에게도 統一問題에 관한 우리의 立場이 分明하게 傳達되도록 하는 努力이 필요함을 切感하고 있다.

2. 韓國의 特殊狀況

統一問題에 대한 韓國的인 특수상황을 日本的인 것이나 美國的인 것, 또는 歐洲的인 척도로 재려고해서는 안된다.

우리 주변에는 어설피게 外國교육을 받았거나 國內에 있으면서도 事大主義的인 根性에 젖어있는 일부인사들은 흔히 韓國的인 觀點이나 韓國人이라는 입장을 떠나 外國人의 韓國觀이나 統一概念을 그대로 導入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흔히 목격한다.

바로 이와같은 部類때문에 統一弘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며 弘報活動에 倍前의 努力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위에서 밝힌 우리나라의 統一政策自体를 부정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기본적으로 外國人들은 韓半島사태를 제 3자적인 입장에서 客觀化

할 수 있고 豐富한 資料등을 動원, 正確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自負하면서 그 權威를 스스로 높히려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 제 3자라고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하나의 중대한 핸디캡이 있다.

第 3 者라는 것은 当事者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生死問題
가 달려있는 切實한 感覺으로 問題解決에 임할수 없으며 더우기
客觀化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当事者들의 既存權益이나 衡平의
原則등을 무시해 버릴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極端的인 例를 든다면 左翼이 아니더라도 中立的인 立場에
있는 日本學者들 가운데는 韓國이 赤化되던 民主化되던 우선 모든
犧牲을 무릅쓰고라도 統一을 實現해 놓고 보아야 할것 아니냐고
태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가운데는 6.25사변을 南韓에서 먼저 挑發했다고까지 歪曲記
述하는 歷史學者가 있다는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와같은 先入觀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韓半島의
統一論議에 對한 正當한 평가가 나올수 있겠는가.

최근 印支사태가 극도로 惡化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일부 美
國人學者와 國會議員들 가운데는 韓半島에서는 絶대로 戰爭이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고 豪言하면서 美軍撤収를 강력히 요구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와같이 우리의 現實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경우에 따라서는 利敵行為가 될만한 이들 外國人들의 주장에 대해 附和雷同하는者가 있다는것은 統一弘報에 가장 큰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現實과 立場을 超越한 어떠한 統一論議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幻想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같은 幻想을 깨는 作業은 統一弘報를 통해서 이루어 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国内認識의 差異

外國으로부터의 影響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国内的要因에 의해서도 統一論議의 異質化現象이 發生한다.

그것은 대체로 두세가지 要因에서 일어난다.

첫째는 心情的으로 경위와 설차야 어떻든 統一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일반 庶民, 그중에서도 특히 越南家族들의 人間的이며 本能的인 念願이 있는 반면, 統一 그 自体에 못지않게 統一에 이르는 過程이야말로 절대로 輕視할 수 없는 重大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 판단하고 있는 政府당국자들의 政策的次元의 慎重성이 간혹 對
立될 때가 있다.

물론 兩者間에는 治者と 被治者라는 立場의 차이 때문에 正面衝突
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반國民들의 統一에 대한 念願은
그것대로 潛在해 있어 機會있을 때마다 爆發的으로 發露되곤 해
왔다.

그와같은 心情的 統一論은 國論이 混亂하거나 選舉등으로 國民感
情이 들떠있는 틈을타서 露骨化되는 例가 많았다.

4.19 直後의 中立化統一論議라든가 板門店으로 向하자는 주장등이
端的인 表現이었다.

둘째는 統一問題가 政爭의 道具로 利用되어온 사실을 간과해 버
릴수 없다.

아무리 政治的活動이 보장돼 있다하더라도 統一問題를 다루는데있
어 자칫 脫線하게되면 바로 利敵行爲가 되기때문에 가급적 具體的
인 代案제시를 꺼려온것이 사실이지만 과거 大統領選舉등을 前後해
서 例外없이 統一問題가 争点으로 登場, 有權者들의 判斷을 흐리게
한일이 있었다.

大衆的인 인기를 얻기위해 전혀 實現性없는 政綱政策을 내세우거

나 또는 그와는 정반대로 統一문제에 대해서는 意慾을 완전히 喪失한 듯한 外面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서 그 誠意를 의심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統一弘報는 全無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밖에 政府当局이 統一論議에 一貫性を 欠如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70年代 初盤에 들어서면서 統一論議가 분분해지자 政府의 統一政策자체에도 變化가 있었을뿐만 아니라 統一政策이 變할때마다 그에 부수되는 弘報가 不足했던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統一弘報의 必要性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政府의 統一政策은 變해도 國民의 対応자세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非正常的인 현상을 빚어냈다.

대체로 이와같은 세가지의 国内的要因이 統一論議의 混線을 자아낸 것으로 생각 된다.

第一章 國內弘報政策의 基本方向

1. 國內弘報의 對象

弘報라는것은 官公署나 組織체가 그의 方針이나 事實에 관한 知識이나 見解를 一般國民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고 官公署 또는 組織체에 대한 信賴關係를 조성하여 目的實現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국민을 說得하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弘報의 對象은 國民全體를 指稱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2차大戰前에 弘報의 歪曲된 方法으로 宣傳 또는 情報라는 用語로 國民을 錯覺에 빠져들게하고 輿論을 操作하는 나쁜의미로 濫用되었던일도 있었다.

그러나 戰後 美國으로부터 도입된 퍼블릭 리레이션 (PR)이라는 概念과 함께 弘報의 참뜻이 되살아난 것이다.

과거의 官尊民卑思想대신에 民主主義的 政治形態와 地方自治의 觀念이 確立됨에 따라 官公署와 國民間에 相互理解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行政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官公署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관점에서 一般國民의 慾求와 不滿을 理解하는 동시에 一般國民도 관공서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현재 어떠한

한일을 하고있는가를 알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관공서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행하고있는 프로그램은

- ① 관공서의 활동방침과 문제를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얼마만큼 관공서가 국민의 利益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알려야하며
- ② 관공서에 대한 誤解를 訂正하고 관공서에 대한 認識을 그릇치는 外部의 壓力團體들의 공격에 대해 對抗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行政事務運營을 원활히하고 그 能率을 높이며 政策의 立案·實施·效果를 일반국민에게 설명하고 批判에 대해서 解答하며 政府內的 職員들을 교육시키고 그 活動에 參加·協力시키기위해 弘報활동은 점차 必要不可欠해져 가고 있다.

이와같은 要式的인 弘報活動以外에 특히 統一問題에 관한 弘報는 單純한 政府정책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統一問題라는것 자체가 具体性和 現實性이 있는 一般施策과는 달리 政治宣傳的 效果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統一弘報는 일반적인 弘報的인 次元에서 特殊한 宣傳的次元으로 비약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宣傳이라함은 輿論이 分岐·對立된 論爭中の 課題로 등장하는 것이다.

宣傳活動은 政治的象徴을 操作하고 輿論을 政府에 有利하도록 統制하는 役割을 맡게 된다.

北韓共產主義와 대치하고있으며 그들과 正反對의 統一路線을 指向하고있는 우리의 立場에서는 統一問題에 接近하는 國民輿論의 統合作業이야말로 더욱 重要視되지 않을수 없게 되어있다.

宣傳과정에서 가장 重視되는 政治的 象徴이 輿論에 미치는 効果는 대충 다음과같은 5가지 方向으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政治的象徴은 關心을 집중시킨다. 하나의 상징으로부터 다른하나의 상징으로 關心의 焦點을 옮기는것이 意見變化를 초래하는 第1步가 된다.

이와같은 象徴변화를 수차에 걸쳐 反復함으로써 宣傳主体가 希望하는 反應을 輿論에 扶植시킬수 있게된다.

둘째 政治的상징은 理解되어야 한다.

宣傳의 效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징의 表面的表示를 나타내는데 그치지않고 그 意味가 본래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상징은 미리부터 固定된 意味를 갖고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宣傳活動을 벌리는자가 상징에 대해서 부과하는 解釋이 여러가지로 가능해진다.

선전의 효력을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상징자체에 대한 여러가지 解釈이 있을 수 있어야하며 宣傳담당자는 그 解釈中の 하나를 자기것으로 消化, 選擇하여 宣傳媒體를 통해 일반國民에게 注入시켜야 한다.

세째는 政治的象徴은 적극적이던, 소극적이던간에 환영을 받게되는데 여기에서 넓은意味의 상징의 感覺的要素가 問題된다.

演說이나 文章은 그 宣傳내용과는 어느정도 獨立해서 文体와 構造와 情緒性등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들면 指導者 자신이 宣傳의 제1선에 나설 경우와 같이 宣傳者自身에 대한 一般國民의 태도가 統制되지 않으면 앞설 경우에 그와같은 要件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네째는 象徴을 認識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觀點에서 상징에 관련되는 人物, 政策 狀況등에 反應을 보임으로서 좁은意味의 意見의 접근·修正이 실현되는 것이다.

다섯째, 政治的 象徴은 行動으로서 나타난다.

상징의 効果는 特定事實에 대한 一時的인 波動範圍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다.

그 効果는 外部的으로 具體화된 応答形式에 의해 既存觀念을 修

正해가며 그 結果, 將來의 応答內容을 변경해감으로서 周邛에 波及되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바와같은 宣傳效果를 토대로 國內 統一弘報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2. 弘報媒体 또는 方法

官公署에서 행하고있는 弘報手段의 主된 內容은 新聞·放送의 利用과 資料의 提供, 出版物의 發行, 施設의 公開, 公聽 및 講演會의 開催·映畵 및 슬라이드의 製作, 포스타의 제작, 展示會의 개최 事業活動의 보고서作成, 팜프렛트 및 機關紙의 작성, 弘報車輛의 利用등을 들 수 있다.

弘報는 새로운 意見을 創出하는 것이 아니라 既往에 存在하는 一定의 傾向을 要因으로하여 그위에 새로운 作用을 더해수는 것이다.

輿論操作은 人間의 偏見을 利用하는것은 가능해도 그 偏見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新聞은 特定의 意見을 創出한다기보다 特定의 意見이 新聞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宣傳 또는 弘報媒體를 통한 効力の 限界와 條件을 미리 제시해주는 것이다.

政治過程에 있어 宣傳이 權力構造에 作用을 미치는 경우 그것은 이미 權力行使 과정에 參與한者들이 만들어놓은 既定方向을 離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宣傳 또는 弘報의 量은 輿論의 異質性 追求하는 効果와 既成要素의 간격, 傳達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 規定된다.

가령 統一問題에 대한 社會的인 意見이 異質的으로 對立되어 있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弘報의 量은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傳達의 手段은 社會의 크기와 關心을 集中시킬수 있는 難易度에 따라 宣傳의 量이 增減되기도 한다.

또한 広範하고도 急速한 社會變化가 일어날때 宣傳의 量은 急増하는 것이다. 煽動的인 宣傳은 緊張度가 높은것을 意味하며 說得的宣傳은 긴장도가 낮은 것을 意味한다. 統一弘報는 어디까지나 說得的宣傳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될 性質을 다분히 內包하고 있다.

說得的인 弘報는 硬直化되거나 슬로우간化 되어서는 안되며 變化와 柔軟性을 갖고 現實感覺的으로 適應해야 한다.

第二章 弘報政策과 技術

1. 弘報政策

弘報活動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데 따라 政策의 全構造와 政策成功与否가 결정된다.

弘報의 전개과정은 워낙 幅이 넓어 좁게는 說得에 의한 方法으로부터 넓게는 直接的인 行動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社會變革의 포괄적인 計劃이 平和的인 方法으로 追求되고 있을 경우, 弘報政策의 중요한 문제는 變革의 成功을 촉진시키기 위해 細部的인 部分에 대해서 양보해도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곧 어느정도까지 原理的인問題에 忠實하고 또 어느정도까지 補助的인 吸引策을 쓸 것인가 하는 選擇과 決斷의 문제를 말한다. 弘報活動에 있어 처음부터 政策의 終局的인 構想을 밝혀버림으로서 分明히 失敗하고 말 것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그 政策의 實現을 위해 우선 當面한 地엽적인 問題부터 착수해야할 경우가 있다.

統一弘報에 있어 根幹이 되는 政策內容은 두말할 것 없이 韓國政府가 立案, 推進, 提議하고 있는 統一方案이다.

統一方案의 窮極的인 目標은 設定되어 있지만 接近方法에 있어 北

韓共產主義者들의 제략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또 國際舞台에 나가 우리의 立場을 몇몇이 밝힐 수 있는 合理的이고도 說得力 있는 方案이어야 하며, 提案者인 政府當局은 물론이려니와 一般國民의 입장에서 心情的으로 충분히 호응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目的意識이 分明하지 않은 政策이란 있을 수 없다.

더욱 政治性이 強한 統一政策을 제시, 宣傳 說得시키는데 있어서는 政策的인 次元에서의 目的부여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心情的으로 自己滿足을 해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뉘따르기 마련이다.

統一을 指向하면서도 過渡的인 方法論으로서 「2개의 韓國」 또는 「유엔」 등 國際機構에의 同時加入 등 二律背反的인 主張을 할 수 있다는데 政策的인 面에서의 罅罅이 있는 것이다.

2개의 韓國論은 결코 궁극적으로 統一을 否定하자는 것이 아니라 統一에 이르는 路程에서 한번 거치고 넘어야 할 段階로서 不可避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흔히 外國 특히 日本等地에서는 南北韓의 永久分斷을 主張하는 者들도 있다.

이들의 論拠는 世界歷史上 東西를 막론하고 民主主義 또는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라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뚫고 統一이 이루어진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당분간 앞으로도 그러한 奇蹟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民主化면 共産化면 둘중의 하나로 單一化될 수 밖에 없으며 中立化統一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理由中의 하나는 日本같은 나라에서는 韓半島가 永久히 分斷統治되는 것이 自己들의 國家權益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有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이 6.23 宣言等を 通해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支持라던가 平和共存의 필요성을 力說한 것은 어디까지나 統一에 이르는 한 過程으로서 一時的이고 暫定的이며 準備期間的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 日本等 一部國家에서 主張하고 있는 2개의 韓國 論과는 根本적으로 그 취지와 목적하는 바가 다른 것이다.

弘報政策의 面에서 이와같은 目的과 취지의 差異點을 鮮明히 부각시킴으로서 一般國民의 疑問點을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弘報政策을 立案하는 段階에서 잠시 論及했지만 統一問題 또는 政府가 내세우고 있는 統一指標 그 自体를 損傷시켜서는 안된다는 點이다.

흔히 弘報目的을 離脫한 弘報를 위한 弘報 또는 大衆操作이나 效果의 蓄積보다는 弘報의 記錄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最終的인

政策樹立者로부터 弘報活動에 대한 評價를 받기 위해 弘報政策을 수립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와같은 現象은 흔히 海外弘報面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弘報担当者들의 誠實性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弘報政策自体에 더 큰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즉 政策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브리핑用정책에 치중하거나 質보다 量위주의 PR을 한다던가 기본적으로 說得力이 결여된 牽強附合式의 弘報를 한다거나 또는 統一政策보다는 弘報政策의 比重을 높힘으로서 統一에 관한 意志가 欠如되는 경우등을 들 수 있다.

철저한 官僚主義社會와 官尊民卑思想이 팽배해 있는 与件下에서 이루어지는 弘報政策가운데는 一般國民을 均一化해 버린 單純하고도 形式的인 弘報政策이 수립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弘報政策자세가 政策樹立者가 一部學者 또는 媒体中心으로 짜여지기 때문이다.

後進國의 弘報政策이 強制性を 同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逆效果를 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弘報担当者들마저 納得할 수 없는 方法에 대한 懷疑와 無誠意를 빚어내게 되는 것이다.

2. 弘報技術

政策에 의해 弘報에 부과된 適合한 弘報活動을 어떤 方式으로 組立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技術의 問題로서 등장한다.

個個의 政策이나 人間, 集團, 制度 등에 대해 어떠한 照明을 해줌으로서 有利한 高地를 占할 것인가 또는 不利하게 取扱될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技術의 問題로 등장한다.

바람직한 弘報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特定の 弘報活動에 대한 聽衆과 經路가 선택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어떠한 統一政策이 새로 발표되었을 때 이를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流布시키고 制限된 範圍内에서는 必要以上으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며 어떠한 經路를 통해 2重3重으로 同一한 내용이 反復해서 投入하는 문제들이 技術에 의해 適用, 開發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時點에 어떠한 내용을 流布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聽衆의 實態와 動靜을 면밀히 觀察해 두어야 한다.

이와같은 實態觀察은 聽衆의 性格이나 그들이 품고 있는 欲求, 期待 등에 의해 左右된다.

聽衆의 實相은 그들의 教育, 계층, 世代的經驗, 性格의 基準에 의

해 測定이 가능하다. 弘報活動을 전개함에 있어 어떤 部分을 除外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聽衆의 實態把握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 밖에 弘報發言의 技術面에서 非難에 대해 무조건 全部 對答할 것인가 또는 경우에 따라 沈黙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며, 不利한 事實을 發表하지 않을 수 없을 때의 時期의 문제도 중요시 된다.

또 傳達手段과 弘報에 임하는 人物의 선택에 있어서도 技術的인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같은 技術의 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어 요지음은 社会学, 心理学, 그밖의 學問的成果가 敏速하게 應用되고 있다.

政治的 象徴의 代表로서 言語의 魔力은 偉大하다.

政治鬭爭이 人間社會에 등장한 이래 弘報의 威力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強力한 宣傳이나 弘報의 魔力으로부터 자칫잘못하면 發生하기 쉬운 加害를 피하기 위해서도 또는 弘報媒体를 自己手中에 넣어 自由自在로 利用하기 위해서 權力手段으로서의 弘報의 統制가 意識・無意識間에 權力主体의 重要한 課題로 利用되고 있다.

社會革命을 거듭하고 있는 現代는 흔히 政治化時代라고 불리운다.

그것은 政治的對立抗爭의 狀況이 統治·外交等 直接 政治에 關係하는
영역뿐 아니라, 非政治的 領域에까지 波及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教育이라든 報道行爲는 弘報나 宣傳과는 엄밀히 區別되어야
하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混用되기 쉽다.

教育과 報道行爲는 客觀的·中立的인 形式을 취하거나와 弘報나
宣傳行爲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形式을 導入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弘報活動의 技術化과정에서 言論의 自由문제를 제외시킬 수 없다.

言論의 自由는 말할 것 없이 自由社會의 民主政治의 標識이다.

自由主義國家에서는 政治活動의 自由를 포함한 言論의 自由가 제도
적으로 保障되어 있다.

여기에 弘報·宣傳活動의 制約的인 條件으로서 言論의 自由가 問
題視되는 것이다.

言論의 自由는 결코 모든 나라에서 全적으로 無制約的인 存在가
될 수는 없다.

어떤 言說이 社會의 價值觀을 위협하며 그 代償的價值를 제공하
지 않을 경우, 그러한 言說을 排除하기 위해 國家와 社會는 強制
력을 行使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國家政策으로 推進하고 있는 우리의 統一方案을 否定

하거나 敵을 利롭게 할 目的으로 現實性이 전혀없는 統一方案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靑少年들에게 惡影響을 미치는 言論, 中傷, 謀略을 일삼는 言論등은 保護할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말하자면 公共의 秩序를 해치는 「明白하고도 現實的인 危險」이 있을 때 制裁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戰時 또는 準戰時 下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國土가 分斷되어 있는 狀況下에서는 言論은 敵國의 戰鬪手段으로 利用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더욱 警戒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우의 言論통제는 弘報의 長期的・短期的으로 國民一般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言論制限의 基準이 어떤 線에서 이루어지던지 간에 少数者나 權力的 위치에 있지 않는 者 및 少数集團의 發言權이 어느정도로 言論自由의 基本權에 의해 保護되느냐 하는 것이 自由의 現實的인 尺度가 되고 있다는 것을 忘却해서는 안될 것이다.

말하자면 宣傳・弘報活動의 展開과정에서 弘報의 必要성과 言論에 대한 國民의 基本的自由와의 距離를 실로 현미경적인 正確性을 가지고 測定하는 것이 弘報技術의 理想論이라 하겠다.

第三章 効率的인 統一弘報展開方案

1. 統一政策의 背景

2次大戰後 國際冷戰의 前哨基地로서 本의 아 니 게 國土가 兩斷 되어 南北으로 갈라진지도 어언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韓半島는 共產勢力의 전쟁도발에 의해 사상 유례없는 同族相殘의 民族的 悲劇을 겪음으로서 국제긴장의 초점이 되어왔다.

유엔군의 지원으로 3년간의 激戰 끝에 休戰이 성립되어 熱戰은 일단락되었지만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南北韓은 더욱 冷戰상태가 에스카레이트됐다.

그동안 北傀는 휴전협정을 수없이 위반, 4大軍事路線에 의한 戰力증강에 광분하는 한편 間諜과 武装共匪를 南派 우리정부의 전복과 사회교란을 기도하는 등 赤化統一野慾을 북돋아 왔었다.

그러면서도 北傀는 대외적으로는 그들의 무장도발의 범죄적 사실과 赤化統一野慾을 은폐하기 위해 南北協商이니 하는 포리부동한 계의 틀 口頭禪처럼 되풀이 하면서 이른바 平和攻勢를 일삼아 왔다.

70년대에 들어서서 국제세력관계의 多極化와 平和共存주세가 가속함에 따라 韓半島를 둘러싼 격렬한 冷戰상태와 극도의 긴장도

서서히 화해될 수 있는 외부적 여건이 성숙되기 시작했다.

70년 8월 15일 朴正熙대통령은 『武力対決의 지양과 평화적 발전 및 개발경쟁을 지양하므로써 실질적인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共同努力을 경주할 것』을 촉구, 平和統一宣言을 천명했다.

朴大統領의 平和統一宣言이 있은지 1년이 지난 71년 8월 12일 大韓赤十字社の 崔斗善總裁는 朴大統領의 平和統一宣言의 정신에 따라 「南北離散家族 찾기 南北赤會談」을 北韓赤十字會側에 제의했다.

朴大統領의 8.15宣言에 일언반구의 反應도 보이지 않았던 北傀는 8월 14일 北赤을 통해 우리의 제의를 수락했다.

그들은 첫째 순수한 人道主義精神에 立脚하고 있는 赤十字社가 무엇보다도 人道的 문제인 「離散家族의 再結合」이라는 문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점, 둘째 赤十字 본연의 업무인 이 문제를 거부할 경우 人道主義問題에 까지 政治權力이 개제한다는 인상을 주어 국제적으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輿論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 등으로 韓赤의 8.12 제의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또한 그들은 赤十字會談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平和攻勢를 전개할 수 있고 南北赤會談을 통해 南韓에 대한 情報把握과 對南선전을 전개할 것을 계산에 넣는 한편 南北赤會談을 平和攻勢의 한

전략적 基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속생을 하고 있었다.

여하간 71년 9월 20일부터 南北赤 豫備會談이 열려 南北사이에는 分斷 27년만에 비로소 對話의 門이 열렸다.

豫備會談이 1년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韓半島 周辺情勢는 너무나 急變, 美·中共의 劇的인 接近이 이루어져 닉슨美大統領의 中共訪問이 실현됐고 日·中共의 접근 또한 가속적으로 진척됐다.

72년 5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의 平壤방문과 같은 해 6월 北傀제 2부수상(현 부총리) 朴成哲의 서울방문으로 南北平和共存의 憲章이라 할 수 있는 7.4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됐다.

이 7.4 성명으로 南北對話의 窓口는 개방, 南北赤會談과 南北調節委등이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南北對話는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그것은 對話를 통해 소위 兩朝鮮革命에 의한 赤化統一을 촉진해 보려던 北傀가 사태의 진전이 여의치 않게 되자 오히려 對話를 정돈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朴大統領은 73년 6월 23일 平和統一外交宣稱을 발표했다.

6.23 선언은

- ① 祖國의 平和的統一은 우리民族의 至上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경주한다.
- ②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간섭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우리는 南北共同聲明의 정신에 입각한 南北對話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안내로서 계속 노력한다.
- ④ 우리는 緊張緩和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⑤ 國際聯合의 다수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아래 우리는 北韓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加入전이라도 大韓民國 代表部가 參席하는 국제연합총회에서의 韓國問題 토의에 北韓側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⑥ 大韓民國은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모든 국가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 ⑦ 大韓民國의 대외정책은 平和 善隣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友邦들과의 연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을 재천

명한다.

朴大統領은 이 7개항목의 新外交政策中 對北韓관계사항은 『統一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北韓을 國家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처해 있는 内外情勢를 냉엄하게 평가할 때 6.23 선언은 긴장완화의 國際潮流속에서 民族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平和統一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기도 했다.

6.23 宣言에 대한 社會主義진영국가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세계의 모든 여본은 社會主義진영의 宗主國인 소련이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韓國선수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韓國선수단의 滯蘇期間中 여러가지로 친절을 베푼 것은 소련당국의 6.23 선언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유독 北傀만이 강경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두개의 韓國化에 의해 民族분열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반발했다. 北傀가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에 不參한 것은 소련이 6.23 선언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항의였으며 73년 8월 28일 소위 金英柱성명으로 對話를 중단시킨 것은 6.23 선언이

국제적으로 어필하는데 대한 신경질적 짜증의 폭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6.23 선언이 국제적으로 호의적 반응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成敗는 對蘇 對中共外交關係를 수립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오히려 그들은 6.23 선언을 逆利用, 위장된 平和攻勢를 취하면서 韓國과 單獨修交를 하고 있는 국가에 파고 들고 있다.

또 그들은 8.28 성명 이후 對話의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채 南北赤實務會議 南北調節委 부위원장회의 등 2元化된 窓口를 통해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

이런 여건하에서 統一弘報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比重이 높으며 統一弘報活動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겠다.

이에 앞서 統一의 概念부터 정립하고 그 弘報方案을 제시하는게 순서인 것 같다.

2. 統一政策의 基盤造成

48년 5월 30일 北韓地域을 위한 1백개 議席을 남겨 둔채 소집된 制憲國會는 6월 12일의 결의문을 통해 北韓同胞가 國會에 보낼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自由選舉를 실시하고 獨立, 統一의

韓國政府를 수립하기 위해 北韓의 國會議員들과 合流하기를 호소했다.

이것이 우리 國회가 제시한 최초의 統韓方案이라 할 수 있다.

48년 8월 15일 大韓民國政府의 樹立을 内外에 宣布하고 統一實現努力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천명했다.

① 大韓民國政府는 그 憲法의 규정에 따라 全韓半島에 대한 主權을 가진 唯一合法政府임을 内外에 선언하고

② 選舉가 보류된 北韓에서 조속히 民主的 선거를 실시. 北韓同胞를 위해 國會에 空席으로 남겨둔 1백석의 의석을 채우도록 촉구했으며

③ 北韓收復은 北韓同胞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성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自由意思가 계속 복제되는 경우에는 大韓民國은 武力에 의해서라도 北韓에 대한 主權을 회복할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했다.

3항의 『武力에 의해서라도……』의 문귀가 李承晩大統領의 소위 北進統一論이라 할 수 있다. 이는 李대통령의 개인적 염원과 국민의 士氣에 관한 정략적 성질의 것이었고 실질적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의 尙内外事情이 도저히 北進을 허용하지 않

는 처지였고 특히 美國이 이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취했고 제약을 가했기 때문이다.

48년 12월 12일 제 3차 유엔 총회는 大韓民國이 韓半島에서 유일合法政府임을 선언하고 유엔 韓國委員會를 설치, 全韓國의 完全獨立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50년 北傀는 6.25 南侵을 감행, 마침내 平和統一이라는 이름 아래 위장됐던 武力統一方案의 正체를 들어냈다. 6.25 動亂中 우리 정부는 北傀의 南侵으로 유엔軍이 統一政府樹立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견해를 취해 유엔軍과의 北進統一을 구상했다.

즉 6.25 動亂은 憲法節次에 따른 統一을 「武力에 의한 統一」로 정부의 統一政策을 일시나마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50년 10월 李大統領은 수복된 北韓地域에 대한 행정권을 大韓民國이 行使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제 6차 유엔 총회에서 北韓에서만 유엔監視下의 自由選舉를 주장했다.

그후 休戰協商의 기운이 성숙해지자 李大統領은 어떤 休戰도 反처하며 統一을 위한 단독전투계속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53년 7월 28일, 休戰協定이 조인된 다음날 李大統領은 『유엔과의 協同아래 韓國統一을 이룩하겠다』고 언급, 統一을 위한

단독행동을 보류하고 다시 유엔을 통한 統韓原則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53년 11월 23일 특별성명을 통해 李大統領은 『北韓만의 선거로 국회의 잔여 議席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나 北韓住民이 원한다면 全國總選舉를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休戰後 「北韓만의 選舉」에서 「全國總選舉」로 바뀐 統一方案에 대한 최초의 성명이기도 했다.

휴전협정 제 4 항에 따라 韓國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위政治會談이 54年 4月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 會議에서 卞榮泰外務長官은 1次發言에서는 北韓에서만 선거 실시를 주장했지만 西方代表들의 희망을 수락, 土着人口比例에 따른 유엔監視下 南北總選舉를 골자로 한 14개조항을 제시했다.

근 2개월간의 토의가 있는 후에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韓國을 비롯한 16개국 西方代表團은 6月 15日 共同聲明을 發表, 제네바 會談은 아무결론 없이 끝났다.

제네바會談以後 单独北進統一論과 유엔監視下 北韓만의 總選論이 다시 제기되었다.

自由黨政府가 무너지고 許政過渡政府가 수립되자 무질서와 불안속에서 革新系의 대두와 더불어 각양각색의 統韓論이 속출, 國內의

統一論議는 亂脈相을 들어냈다. 이러한 混迷속에서 7.29 總選을 통해 집권한 張勉民主黨政府는 그 統一方案으로 完강한 武力統一論을 포기하고 「南北總選舉에 의한 平和統一」이란 제네바原則을 따르기로 했다.

鄭一亨外務長官은 60년 8월 『北進統一과 같은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슬러전을 지양하고 유엔결의를 존중, 유엔監視下에 南北韓을 통한 자유선거에 의한 統韓政策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自由黨 때와 달라진 것은 「유엔결의에 의하여」라는 語句를 「유엔결의를 존중하여」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제 15차 유엔總회에 아시아 아프리카 新生國이 대거 加入하게 되면 유엔會員國數가 근 1백개국으로 늘어나므로 58개국의 회원국을 想定하고 세워진 統一方案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과 만일 유엔에서 容共的 결의가 채택되는 경우까지를 고려해서 취해진 대책이었다.

61年 5月 16日 革命정부는 統一방안에 대한 國論統一을 圖謀했다. 혁명정부는 혁명공약에서 『민족적 宿願인 國土統一을 위하여 共產主義와 대결할 수 있는 實力배양에 全力을 집중할 것』을 밝혔다.

혁명정부의 統一방안으로서는 61년 6월 『우리는 武力에 의한

國土統一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적 방법으로 統一을 추구하고 유엔
監視下의 남북한 총선거실시를 강조한다』고 천명되었다. 이 방
침은 제3共和國 탄생후에도 변함없는 정부방침으로 계승되고 있다.

朴正熙大統領은 64년부터 시작한 年頭會見에서 統一에 대한 정
부방침은 확고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67年 年頭敎書에서는
『착실하고 꾸준한 統一의 노력은 統一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 수
많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과업에 충실하는데서 소기의 성과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경제건설과 民主力量을 강조했다.

70년 新年辭에서 朴大統領은 『70年代에는 國土統一方案을 적극
적으로 모색 추구해 나가는 일방, 평화적 방법이든 비평화적 방법
이든 어떠한 방식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대
응할 수 있겠음 北韓에 비해 絶對優位の 힘을 항상 확보해야 한
다』고 했고 年頭會見을 통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高地를 먼저 점거하고 統一에 대한 주도권을 잡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유엔監視下의 土着人口비례에 의한 總選舉라는 우리의 統
一方案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南北韓이 궁극적 정치적 統合
을 이룩하는 것은 많은 난관과 시련을 먼저 극복해야 하는 먼

장래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統一의 概念을 可能적 역량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1차적으로 戰爭방지와 緊張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南北이 합의하기 쉬운 문제부터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서 平和統一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南北對話가 정치적 統合으로 이끌 것이라는 환상을 불식시켜 南北對話는 平和統一의 1단계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弘報할 必要가 있다.

이같은 角度에서 統一弘報를 효율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第四章 統一弘報政策의 問題點

北傀는 階級革命과 世界共產化의 필연성과 當위성을 주장하는 마르크스, 레닌主義를 정립하는데 存在價值를 찾고 있다. 따라서 北傀는 마르크스 레닌主義에 입각한 統一만을 추구하고 있고 修正主義와 平和共存路線을 배격하고 있다.

그들은 統一은 南朝鮮의 革命을 전제로 하는 統一이며 그들의 旗幟下의 統一이라고 주장하면서 『祖國統一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평화적 方途가 있을 수 있으나 南朝鮮革命에서는 결코 平和的인 길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폭력적 방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말을 쉽게 한다면 統一이 되려면 먼저 南朝鮮革命이 수행되어야 하고 오직 폭력적 방법에 의해 南朝鮮革命을 수행하여 南韓에 共產政權이 들어설 때 비로소 평화적 統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次元에서 우리의 統一弘報는 北傀에 비해 脆弱點이 많은 것 같다.

우선 統一弘報에 있어 文公部, 中央情報部와 중복되는 면이 많아 이를 統一院이 장악해야 한다.

現國土統一院의 教育弘報局의 人力과 豫算으로는 도저히 統一弘報를 전개하는 것 자체가 無理이기도 하다.

統一弘報를 위해 專門職人力을 과감히 起用, 우선 體制부터 정비해야 하며 豫算의 大폭增額이 소망스럽다.

둘째 統一弘報는 平面的 次元에서 立体的 次元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 같다.

빈약한 예산과 한정된 人力으로 統一院이 統一弘報를 할 것이 아니라 統一院이 주축이 돼 文公部 등이 포함된 정부, 國會, 言論界 學界 등으로 구성되는 「統一弘報委員會」를 구성 종합적 통일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慎道晟 統一院長官이 朴正熙 大統領에게 보고한 統一開發戰略委員會에서 이같은 기능을 발휘해도 무방하다.

또 統一弘報에는 心理戰 전문가가 참여 對北傀 및 對共產圈 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게 體系化돼야 할 것으로 본다.

종전처럼 우리의 統一方案이 옳고 北傀의 統一方案이 그르다는 전면일률적인 弘報보다는 統一의 概念부터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이 時急하다. 月刊誌나 一般弘報책자도 중요하지만 社団法人 内外通信처럼 統一問題를 전담하는 統一通信(仮稱)을 週1回 발행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다.

세째 統一院은 統一弘報에 있어 社会团体와의 協調關係가 미약한 것 같다.

反共聯盟, 赤十字社, 勞總, 体育會등 주요 社会团体들과 계휴, 北傀의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과 대결할 수 있게 聯合體 구성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統一院은 社会团体代表들과의 빈번한 對話를 통해 北傀의 사정을 보고 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네째, 海外旅行者들에게 統一弘報를 실시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

移民, 觀光, 公務, 貿易등 각가지 목적으로 國民들이 外國에 나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소양교육에 추가, 統一교육을 실시, 혹시 제3국에서 北傀人들과 對話할 기회가 있을 때 대비해야 할 것 같다.

다섯째, 統一研修所의 교육코스를 확대 예를 들어 高等班, 中等班 初等班 등으로 나눠 學界 言論界人士에게도 門戶를 開放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

學界나 言論界人士가 官主導下의 교육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記者協會 編輯人協會 新聞協會에서 統一院에 위

탁교육을 요구하는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과정에서 統一弘報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南北對話對策회의에 당연히 國土統一院長官이 멤버로 참석해야 한다. 리서치·센터의 입장에서 탈피, 政策立案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런 태세가 갖추어야 統一弘報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지 현기구체제론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곱째, 對言論弘報活動이 극히 미온적이고 受動的인 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國家기밀에 속하는 자료도 있겠지만 統一院이 研究 또는 수집한 자료를 재분류, 공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과감히 공개하여 言論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西獨 및 台灣등 分斷國家에서 수집한 자료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개 統一弘報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統一院의 顧問은 각계각층의 元老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 顧問들은 超党的 性格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印支事態 및 金日成의 北京訪問 등으로 超党的安保体制의 구축이 時急하다는 여론이 비등할 때 統一院顧問들에게 정세를 브리핑하고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이라도 채택할 수도 있다.

統一院顧問會議를 통해서도 統一弘報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홉째, 政黨 및 社會團體의 要請에 부응하기 위해 統一講師陣을 확보해야 한다.

統一問題의 경위, 과정, 전망등을 알리기 위한 연사요청이 있으면 즉각 강사를 파견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 강사진들은 강연이 끝난후 청중의 반응과 자신의 강연내용을 종합 검토하는 評価會도 자주 가져 統一弘報의 문제점을 추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統一院은 대학과 언론기관의 北韓 및 統一問題研究所 혹은 社會단체의 統一연구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개별적 접촉을 부단히 벌여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자세가 더 한층 必要하다고 본다.

第五章 統一弘報의 구체적 方案

우리의 統一方案은 유엔監視下의 土着人口비례에 의한 自由選舉이다. 또 南北韓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統合을 이룩한다는 것은 여러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먼 將來의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고 장기적인 眼目下에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같은 현실때문에 南北韓 유엔加入을 골자로 한 6.23선언이 나왔고 南北赤實務회의와 南北調節委부위원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72년 7.4성명이 발표되자 곧 統一이 달성되는 것처럼 허황한 꿈을 일부국민이 꾸는 過誤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統一弘報은 우리의 歴史的 사실과 共產主義者와의 協商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오래 소요되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新羅가 三國을 통일할때의 歴史的 背景, 그 기간등을 홍보하기 위해 統一院이 주선, 史學者와 言論界와의 對談도 필요하며 美·中 共 회담이 長長 10년이상 끝었다는 점을 강조하기위해 국제정치학자와 언론계 對談등을 統一院이 주선할 수 있다.

따라서 統一弘報은 南北韓의 정치적 統合에 앞선 中間단계 즉

기능적인 면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때문에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을 찾기위한 南北赤本會談이 열렸던 사실을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離散家族 찾기운동이 왜 교착상태에 빠진지는 소상히 모른다.

물론 北傀측이 反共法, 國家保安法의 철폐 등 內政간섭적인 요구를 해 회답이 진전이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알지만 北傀가 왜 회답에 응했고 왜 회답을 기피내지 거부하는 이유는 잘 모르는것 같다.

또 왜 北傀가 南北赤實務회의나 南北調節委부위원장 회담등 극히 실무적인 회담에 응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

이같은 의문점을 統一弘報의 次元에서 해결해야 할것으로 본다.

우선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위해 統一院에 統一문제 상담 전담직원을 상주시켜 질문에 답변하고 토론도 할 수 있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外信이나 기타 매스메디어를 통해 北韓관계기사가 入手됐을 때 이를 상담할 수 있는 統一院의 태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北傀外交部長 許煥이가 파키스탄에 갔다』는 外信이 入電됐을 때 許의 党内序列이나 그의 경력같은것을 언론계에서 문의

한다면 이를 즉각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또 金日成이 北京에 가서 鄧小平과 장시간 회담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면 統一院도 統一院나름대로의 분석,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金의 中共방문이 우리의 統一方案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왜그들은 무작정 어려운 政治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모든것을 一括해 처리하자고 선전하지만 그저의가 어디있는가를 弘報해야 할 것이다.

慎道晟統一院長관이, 75년 4월 金日成의 北京訪問과 타이밍을 맞춰 기자회견을 통해 『北傀의 南侵은 가상적 단계를 벗어나 실천적 단계에 도래했다』고 밝힌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憲法기관인 統一主体国民會議의 代議員을 상대로한 統一弘報를 輕視할 수 없다.

74년 12월 統一主体国民會議 代議員의 統一安保세미나에 慎道晟 장관이 참석, 많은 代議員과 對話했지만 이들은 有力한 地方有志들이 다.

2천 3백여명代議員에게 統一院이 발행하는 發刊物을 우송하는것도 한 방법이 된다.

統一主体国民會議事務處와 협조, 代議員들의 세미나에 統一院의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 統一弘報를 할 수 있다.

세계, 海外僑民 상대로 한 統一弘報가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英·仏·中·日語등 외국어로 우리의 統一白書를 번역, 발송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僑民상대로 한 統一弘報를 위해 統一院직원이 美国, 프랑스, 日本등 주요국가의 대사관이 파견되어야 한다.

물론 文公部の 해외공보관이나 외무부의 직업외교관이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역시 統一院의 전문적 직원이 파견되어 이를 전담해야 할 것이다.

네째, 유엔總會등 統一문제와 관련된 국제회의에는 統一院이 참가해야 할것이다. 외교무대라고 外務部가 전담할 것이 아니라 統一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統一院이 소외된것은 모순인것 같다.

이는 統一弘報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정세와 統一弘報를 연관시키는 機動性이 필요하다.

크메르와 越南이 소위 統一戰線이라 할 수 있는 크메르·루지 (Khmer Rouge) 와 베트남에 의해 無力하게 白旗를 들고 만 사 실을 統一弘報와 연결시킬 수 있다.

共產主義者와의 協商, 나아가 平和統一 노력을 하려면 힘의 均衡

나아가 그들보다 国力이 강해야되고 共產主義者들과 맺은 協定도 그들이 강해지면 休紙化된다는 眞理이다.

이같은 기초위에서 우리의 平和統一노력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가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했던것을 다시하면 설명해야한다.

아울러 北傀가 平和統一을 방해하기 위해 어떠한 도발과 어떠한 정치적 공세를 전개해 왔는가를 소상히 기록된 「北傀의 虛實」이란 책자를 발간하는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① 韓半島는 3년여에 걸친 6.25라는 처참한 同族相殘의 戰禍를 겪었고 그뒤에도 赤化統一을 노리는 北傀측의 계속되는 각종 도발행위로 말미암아 緊張이 가실 날이 없었다는 점. ② 韓半島의 긴장은 金日成의 偶像化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격화되었다는 점등을 중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줄기를 토대로 68년 1.21사태 三陟, 蔚珍사태 푸에블로호 사건, 11.21사태 74년 8.15사건, 땅굴사건, 東西海岸사태 등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印支사태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여섯째, 北傀의 소위 黑色放送인 統一革命黨소리 방송이나 平壤放送

의 電波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統一弘報를 하기 앞서 北傀의 電波를 막는 작업이 중요하다.

北傀는 心理戰的 次元에서 放送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봉쇄해야 할 것이다.

우선 KBS-TV 視聽料일부를 北傀전파를 방해하는 豫算으로 전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에 까지 우리 放送을 청취할 수 있게 難聽지역을 전면 해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放送프로그램에 統一에 관한 5분내지 10분간의 시간을 얻어 平和統一을 달성하기 위한 그간의 정부노력을 PR하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統一院은 제 2차世界大戰이후 類型別로 共產化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 각계에 배포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 책자를 통해 北傀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人民統一戰線과 허구성과 危險성을 고취할 수 있다.

이책자에서 印支사태를 우선 다뤄야 할 것이다.

印支의 전쟁형태는 毛沢東의 戰略방정식인 「陣地戰+遊擊戰보조역할」보다 보·구엔·지압의 최종 단계의 定式인 「陣地戰+運動戰지배

적 역할」 등이었음을 수상하게 쉽게 풀이한다. 統一戰略이 東歐에서 어떻게 전개됐으며 아시아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느냐를 기술하면 된다.

東歐에서 ① 유고와 알바니아共産化과정 ② 불가리아의 共産化과정 ③ 체코, 폴란드의 共産化과정 ④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共産化과정 등을 아시아에선 中國의 共産化과정, 특히 .플트갈, 쿠바사태까지 묶어 『人民革命戰略』이란 책자를 발행, 統一弘報 자료로 이용케 해야 한다.

여덟째, 北傀의 外交的 攻勢 특히 해외에서의 선전공세를 막는 多角的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그들은 對外선전에 제한없이 달러를 투입하는 실정이므로 이들과 金力으로 대결할 수는 없다.

次善策으로 國內新聞을 해외에 배포하는데 정부가 전폭 협조하는 방안도 있다. 즉 정부가 國內新聞을 해외僑民들이 구독하도록 권유하는 방법과 정부의 신문을 대량으로 구입, 중요국가에 僑民들에게 배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나아가 우리新聞을 주요국가의 圖書館에 기증하는 방법도 있다.

아홉째, 정기브리핑制度가 확립돼야 한다.

적 역할」 등이었음을 수상하게 쉽게 풀이한다음 統一戰略이 東歐에서 어떻게 전개됐으며 아시아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느냐를 기술하면 된다.

東歐에서 ① 유고와 알바니아共産化과정 ② 불가리아의 共産化과정 ③ 체코, 폴란드의 共産化과정 ④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共産化과정 등을 아시아에선 中國의 共産化과정, 특히 폴트갈, 쿠바사태까지 묶어 『人民革命戰略』이란 책자를 발행, 統一弘報 자료로 이용케 해야 한다.

여덟째, 北傀의 外交的 攻勢 특히 해외에서의 선전공세를 막는 多角的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그들은 對外선전에 제한없이 달라를 투입하는 실정이므로 이들과 金力으로 대결할 수는 없다.

次善策으로 國內新聞을 해외에 배포하는데 정부가 전폭 협조하는 방안도 있다. 즉 정부가 國內新聞을 해외僑民들이 구독하도록 권유하는 방법과 정부의 신문을 대량으로 구입, 중요국가에 僑民들에게 배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나아가 우리新聞을 주요국가의 圖書館에 기증하는 방법도 있다.

아홉째, 정기보리평制度가 확립돼야 한다.

물론 統一院이 研究기관이라 하지만 言論界중견간부들과 만나 北
傀의 실정과 統一의 長短期대책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브리핑한후
自由討論을 가지는 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딩크·탱크로서 각기관의 자문에 응하는 것도 좋지만 언론계의
자문도 기동성있게 받아야 할줄안다.

열째, 統一院은 자료공개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1급, 2급, 3급등으로 분류된 자료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겠
으나 학계나 언론계부속 연구소에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으로 본다.

第六章 國內미디어의 動員方案

統一弘報의 미디어로는 라디오 TV放送이 가장 효과적이고 波及 效果가 크다고 본다.

우선 對北放送을 강화, 心理戰으로서의 統一弘報를 강화해야 한다. 放送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金日成唯一體制 思想 및 價值觀등을 파괴하고 아울러 우리 體制의 優位性을 과시해야 한다.

이 방송은 ① 광범한 지역에 同時電波를 보낼 수 있고 ② 文盲者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③ 用語, 音聲등을 임의로 하여 情緒유발에 직접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도 對北비난의 次元을 좀더 細分化, 韓國의 歷史, 우리의 政治思想史, 韓國의 文學등을 소개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北傀의 모든 分野는 金日成唯一思想에 귀착되어 있는 만큼 民族의 正統性을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對北放送프로그램에 「統一의 意志」(假稱)라는 시간을 배당받아 3 國時代의 統一과업, 현 우리의 統一노력을 비교해가면서 방송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것 같다.

물론 北傀의 모든 有線라디오가 輦프시설화하여 다이알을 고정시

키고 있어 무슨 效果가 있겠느냐는 疑問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放送을 청취할 수 있는 北傀의 特權層에게나마 가냘픈 統一弘報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新聞을 통해 帰順者의 手記를 게재하는 방안을 統一院에서 추진하기 바란다.

우리 新聞이 제 3 国 (日本이나 홍콩) 을 통해 北韓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統一院은 일률적으로 각신문에 資料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신문특성에 맞게 資料를 제공, 間紙에 게재케 하는 방안을 능동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령 統一院의 정책기획실이나 정책조사실에서 연구한 자료라든가 수집한 자료를 테마별로 나눠 각신문에 배포하면 언론기관에서도 협조할 것으로 본다.

우리 統一문제에 대한 外信이나 또는 국제무대에서의 統一관계문 제점이 있다면 統一院이 능동적으로 코멘트도 하고 해설자료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신문論說이나 칼럼을 이용, 우리 統一문제를 자주 거론토록 해야 한다.

한때 南北對話가 활발할 때는 統一문제가 論說에 자주 등장했지만 최근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세제, 予算당국의 이해가 없어서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統一院은 統一弘報를 위한 予算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사회각계각층과의 對話, 각종 세미나, 각종 강연회등을 위해서 현재의 予算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國家財政上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月 1회 言論界와 對話의 기회를 統一院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格式을 갖춘 對話보다는 담당局長이나 실무자가 매스컴의 實務者들과 어울리며 자유토론하는데서 最大公約數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네제, 라디오放送局이나 TV放送局과 統一院이 제휴, 統一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다.

현대의 매스컴은 라디오, TV가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시나리오를 統一院이 제공하고 연출과 각색은 방송국측에 위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日日연속극이나 週 1회연속극으로 약 3~4개월동안 계속하다 끝난후 청취자나 시청자의 여론을 수집, 앞으로의 統一弘報정책에 이

용할 수 있다.

다섯째, 東国大 李瑄根총장이 國務會議나 TV에서 國史강의를 하고 있지만 朴鍾和씨같은 歷史小說을 쓰는 분에게 3國統一을 배경으로 한 大河小說을 쓰게 統一院이 주선하는 것이다.

이는 統一院, 言論界, 筆者등 3者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大作을 통해 우리 韓國民族의 統一을 위한 意志, 슬기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統一院자체에서 P.R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다.

文公部에서도 시도했지만 統一院이 아이디어를 모집, 참신한 기록 영화를 제작, 統一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설명하고 그러나 平和 統一은 꼭 이룩해야 한다는 當爲論을 제시하면 된다.

일곱째, 慎道晟장관이 75년도 臨津閣에서 北傀에 대해 南北對話를 어디에서도 열 수 있고 어느때라도 열 수 있다고 촉구했듯이 앞으로 統一院은 對北傀제의를 자주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메스미이디어를 동원할 수 있다.

北傀의 가장 弱点인 宗教문제에 焦點을 맞추어 南北宗教人의 교환등을 계의, 統一院이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아울러 南北離散家族찾기南北赤十字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만큼 統

一院은 金剛山과 제주도 한라산을 방문할 수 있는 南北觀光團의 교환을 제의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統一院은 매스콤의 脚光을 받을 수 있는 記事를 제공하는 것이 急先務인 것이다.

여덟째, 平和統一을 달성했을때나 勝共統一을 이룩했을 때의 마스터플랜을 어느정도 매스콤관계자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統一문제가 사랑방좌담의 단계에선 벗어난 만큼 통일의 장기목표 및 중단기목표에 대한 윤곽이라도 매스콤관계자는 인식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아홉째, 統一院은 西獨內獨省의 업무현황 및 自由中國國民黨과 行政院의 本土收復에 대비한 각종 프로그램 자료를 수집, 가능하다면 우리 統一院과 비교해서 비공개리에 브리핑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統一院발족이래 우리는 어느정도 연구했고 分斷國家인 西獨과 自由中國의 현황은 어떤가 비교감각을 일깨워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統一院은 統一弘報와 동시 統一의 概念을 定立해야 할 것이다. 南北對話를 통해 일부에선 『平和統一을 앞당기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統一公害』를 제거, 참다운 統一의 概念을 統一院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結 論 및 建 議

우리의 統一弘報는 아직 연륜이 짧지만 체계를 갖출 때가 온 것 같다.

이 弘報는 現代戰式 總力戰으로 心理戰, 思想戰, 謀略戰, 情報戰, 經濟戰, 政治外交戰을 복합시킨 성격을 띄어야 하며 理念투쟁을 신문, 방송, 통신, 출판물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개해야 할 것이다.

印支사태에서 教訓을 얻었지만 共產主義들과의 협상은 힘의 均衡이 있어야 하며 실사 공산주의자들과 맺은 협정은 休紙에 불과한 점을 統一弘報의 根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 大略이나마 우리 統一弘報의 문제점을 훑어본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對政府建議등을 내놓는다.

① 北韓 共產集團을 의식하고 統一弘報를 教養的 次元에서 心理작전, 宣傳작전, 정치외교전의 次元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統一院에 統一弘報자료센터를 설치하고 매스콤에 門戶를 개방해야 한다.

또 자료작성에 있어서도 그 相對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히 지역적인 사건, 사실등 일반이 잘모르는 사실을 토대로 하면 충분

한 心理효과를 거둘수 없기 때문에 一般化되고 常識化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사로 잡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統一戰略研究委員會산하에 統一弘報위원회를 설치, 학계, 언론계 인사가 참여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게될 이 위원회에서 統一弘報의 방향과 전개방안이 추출되어 參考資料로 이용되어야 한다.

④ 해외僑民들은 각지역별로 빈약한 내용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해 줘야 한다.

아울러 대구모,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등으로 부터의 情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⑤ 反共民間단체를 육성하고 北韓研究에 관한 연구과제를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對內外的인 弘報資料로 삼아야 한다.

⑥ 統一院의 統一弘報도 月刊誌등에 국한 할것이 아니라 드라마, 영화등에 까지 확대 立體的인 弘報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동성있게 대처해 나가고 매스콤의 問議에 즉각 응할 수 있는 專門家를 양성하고 아울러 비치해야 한다.